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에 도내 정치권, 잇따라 비판

민주 도당 “반헌법 세력에 투항한 내란 야합” 혁신당 도당 “본색 드러낸 것… 용납 불가”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도내 정치권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 도당 “반헌법 세력에 투항한 내란 야합”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반헌법 세력에 투항한 내란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김 후보와 함께 ‘공동정부·개헌연대’를 발표하며 전격적인 연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성장한 이 고문이 민주당과 호남 정신을 외면하고 윤석열 정권을 옹호한 세력과 손잡았다”며 “호남 유권자의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

속으로 광주에 출마해 낙선했던 이 고문은 이미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치적 비전도, 미래도 없는 상태에서 반헌법 세력과 손잡은 그의 행보는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은 1980년 광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야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도당 “본색 드러낸 것”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배신이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그가 스스로 그 가치를 내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 전 총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에도 그의 언행 사이엔 깊은 과리가 있었고, 오늘의 선언은 그것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정치적 본색이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개혁 진영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인물이 결국 반대 진영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정치적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정치적 퇴장과 역사적 심판뿐”이라며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정치인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은 이 전 총리의 지지 선언이 나온 당일, 즉각 발표된 것으로, 진보진영 내부의 격한 반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호 기자

“29~30일 사전투표 직장인 배려해야”

민주 김운덕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운덕 의원(전주갑)은 27일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직장인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운덕 총장은 “사전투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29일~30일 이틀간 진행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운덕 총장은 “평소와 달리 평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께서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규모



산단 직장인들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산단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고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증설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운덕 사무총장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간부인 김문수, 명태균과 간부인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 리가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의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이제 위대한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 한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도구로 전관후임의 김문수, 명태균의 이준석을 사용하겠는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의 이재명 후보를 사용하겠는가 답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호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호우 산림재해 예방 나서

도, 산사태 대책상황실 가동…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계

전북자치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본격 운영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와 시군에 설치된 상황실은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기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위기경보 신속 전파, 예측정보 분석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을 체계화하며, 도는 이번 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병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산사태취약지 2,618개소, 산림휴양시설 33개소, 산지태양광시설 41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보수조치를 완료했으며, 969개소의 대피소도 사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산사태 실태조사를 513



개소에 대해 실시해 위험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산불피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무주, 진안, 고창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담당자,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완료하는 등 산사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사방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36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90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13ha,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 총 139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90% 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 중심지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사업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4개 시군(군산,익산,완주,무주)에서도 복구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및 임도 45개소에 대해서 총 108억원을 투입해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모든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기상여건에 따른 수시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사진)은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은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종합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①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전용태·윤수봉·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발발장애인 부모들이 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②같은 장소에서 농촌지도자전북연합회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북 곳곳 이재명 후보 지지 움직임 계속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전북연합회도 힘 보태

“농업 살릴 유일한 대안… 1만5000 회원 뜻 모아”

전북지역 대표 농업단체인 (사)농촌지도자전북연합회와 생활개선회전북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양 단체는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단체의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수봉, 윤정훈, 전용태 전북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지지 선언에 힘을 실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민주주의는 위기

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농업은 정책적 무관심 속에 쌓였던 불안정하고 농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농업예산 축소로 약속했던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12.3 불법비상계엄 문건 사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적 폭거이며, 그 핵심 인물들이 여전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침묵을 안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5대 농정공약을 주목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농업 공약을

통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재명 후보는 농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방을 가장 강하게 살릴 수 있는 철학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1만 5천여 회원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지 선언은 전북 농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지향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이자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와 푸대접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내 장애인 가족 1만1,652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우선과제를 묻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란세력 청산이 최우선”

전북개헌운동본부, 도민 참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우선과제를 묻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총 2,473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1,408명(56.9%)은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뒤를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수처 제도 개선’(1,177명·47.6%), ‘내란동조·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1,071명·43.3%)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803명·32.5%), ‘돌봄 국가 책임 강화’(761명·30.8%)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개헌 추진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이 1,454명(58.8%)의 선택을 받아, ‘2028년 총선과 함께

(523명·21.1%)를 크게 앞섰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기본권 강화’가 1,102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발안권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 989명(40%)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기본권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노동권 강화’가 1,431명(57.9%)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안전권 조항 신설’에도 950명(38.4%)이 응답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민경 본부장이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전여통 전북도연합 송미옥 회장은 개헌 과제를 각각 소개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종식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단체인,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경찰, 내란 동조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장 등 출국금지 연장

12·3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중순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내린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이 최근 확보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다른 점을 포착해 전남 소환조사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결과, 문건 수령 상황이 기존 진술과 달라 이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

경찰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여좌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뉴시스